정동영 U턴 "3지대는 없다"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속리산에서 자신의 지지조직인 '정통들' 회원들과의 산행 전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신당 창당 포기 "당내에서 조력할 것"
오늘 孫과 회동…신당 '화해모드' 전환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일단 신당 창당을 포기했다.

정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지지조직인 '정통들' 회원 400여 명과 함께 충남 보은군 속리산을 등반하는 길에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야당, 야당다운 야당을 일으켜 세우는 데 조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명 야당의 길을 건설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측근 일각에서 거론되던 탈당 후 독자세력화를 뜻하는 이른바 '제3지대 신당론'을 접고 당내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 전 장관은 전날 손학규 대표와 통화하면서 선명하고 강한 야당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르면 4일 손 대표와 만날 예정이어서 신당 내 갈등은 일단 봉합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산중 연설을 통해 "인수위와 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영어몰입교육이라든가, 한미FTA, 통일부와 농촌진흥청 폐지 등 시대착오적이고 민생을 안중에 두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판해야 하고, 건전한 야당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며 "신당이 시시비비를 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다운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약자와 서민, 힘없는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진정한 개혁세력의 집결지를 만들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의 통합은 절차적인 문제나 작은 이해관계를 떨쳐내고 반드시 설 전에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공천과 관련, 그는 "당 지도부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을 모셔서 개혁 공천의 길을 가는 것이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며,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박 위원장은 강직하게 살아온 우리 사회의 원로인 만큼 개혁공천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총선 출마를 포함해서 설을 지나면서 생각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당-민주 통합협상 막판 진통

'공동대표제' 조율만 남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협상이 '공동대표제'를 둘러싼 양당간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신당은 휴일인 3일 당산동 당사에서 손학규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주당과의 설 연휴 이전 통합을 성사시키는 문제를 집중 토론, 야당세력 결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뒤 민주당쪽과 공동대표제의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접촉에 나섰다.

정균환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모두 통합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다만 민주당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또 일을 어렵게 만들면 큰 일 아니냐는 식의 걱정이 있었고, 공동대표제 문제는 민주당과 얘기를 해본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측이 공천지분 요구와 공천심사위 동수 구성 요구를 모두 철회한 상태여서 현실적인 걸림돌은 거의 제거된 상태이나, 공동대표제가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前 의원 "광주·전남 소외정책 중단을"

4·9 총선 현장

○…광주 동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주선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최근 발표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관련, 3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 소외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박 예비후보는 성명서에서 "새 정부는 조선대를 로스쿨에서 배제하는 등 출범하기도 전부터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지역차별의 신호탄으로, 호남 홀대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

이용섭 前 건교 "광산 첨단 출마" 선언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4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총선에서 광산구 첨단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

지난 1일 선관위에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이 예비후보는 관세청장,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수석, 행자부장관 등 오랜 공직생활 동안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며 표밭 갈이에 나설 계획.

김용억 "인수위 호남 홀대, 공동 대응을"

○…광주 북을 지역 출마를 선언한 김용억 예비후보가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호남 홀대 정책에 맞서 범 지역적인 연대회의를 개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

김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호남의 사회경제적인 소외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 전략을 방관하면 우리의 희망찬 미래는 없다"면서 "호남의 미래 발전 동력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행정, 학계가 정파적 차이와 이해를 넘어 공동대응하는 연대회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이윤정 이번주 '정책 DAY'로 선포

○…이윤정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이번 주를 '정책DAY'로 선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매일 차례로 발표할 계획.

이 예비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자가 선택되는 것은 재앙"이라며 "철저하게 준비된 후보임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번 일주일간 '한전 유관업체를 남구에 50개 이상 유치' 등 각종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강조.

서정성 원장, 급식 봉사활동

○…남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이 후원회를 결성하고 급식 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등 표밭갈이를 본격화.

서 후보 후원회장으로는 시각장애인 김영일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와 이원구 조선대 총동창회장이 선출됐으며 이들은 선거기간동안 서 후보의 정책 개발에 자문을 맡는 등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

강진·완도 시민단체 "선거구 통폐합 반대"

○…강진과 완도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진과 완도, 장흥군을 단일선거구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

이들 단체는 국회의장 등 각계에 보낸 건의서에서 "지역주민의 생활기반과 정서를 고려하면 강진, 완도, 장흥이 단일 선거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타 시군과의 선거구 통폐합 논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

김승남 '영어 공교육 방안' 철회 촉구

○…광산지역 출마를 선언한 김승남 예비후보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영어 공교육 방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김 후보는 이날 '영어교육, 극심한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교육을 시장 논리에 대입시켜서는 안된다. 영어 교육만으로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해찬 "총선 불출마"

지역구 정태호에 넘겨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한 이해찬 전 총리가 18대 총선에 불출마하는 대신 자신의 지역구(서울 관악을)를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이해찬 전 총리측은 3일 "두 사람이 관악을 출마 문제와 관련,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이 전 총리가 정 전 대변인에게 잘 하라고 격려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최근 이 전 총리를 만나 관악을 출마의사를 밝혔고,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는 정 전 대변인에게 "적극 돕겠다. 내 지역구 사무실을 선거 사무소로 사용하라"고 말하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총리는 당분간 친노 진영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재단법인 '광장' 활동에 전념하며 향후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친노 진영 일각에서는 '친노 신당'이 총선 전에 만들어지면 비례대표를 받고 정치활동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이 전 총리측은 이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공천 갈등' 일단 봉합

親朴측 '공천 신청 당규 완화' 수용
姜대표 당무 복귀…심사 과정 '불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이방호 사무총장의 화해로 한나라당 공천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공천 과정에서 친이(親李·친 이명박)-친박(親朴·친 박근혜)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벌금형 전력자의 공천 신청을 허용키로 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는 이 사무총장이 사퇴하고 선거법, 윤리위 징계 등도 공천 심사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도 소장·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명분이 있는데 자꾸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부정부패 관련자의 공천 신청을 불허하는 당규 3조2항의 경우 금고형 이상 전력자에만 해당한다는 적용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 측의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은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김 최고위원의 공천심사 탈락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해소 분위기에도 공천다툼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박 전 대표 측 다수는 이 사무총장이 계속 공천에 관여할 경우, 앞으로도 친박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이 사무총장의 사퇴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최고위 의결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당내 갈등과 분란의 원인을 계속 제공해 왔던 이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이 사무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는 한 갈등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